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구체 요구안 나왔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적 피해자 권리 보장"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02 12:58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련 구체 요구안
피해자 가족들, "대책위와 대응 함께, 참여 소통 보장해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공개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직후 노동, 법률, 이주, 인권, 종교, 시민사회 등이 모여 긴급하게 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고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등 관련한 대응 방향을 모색한 결과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노동시민사회가 꾸린 대책위와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구성한 가운데, 가족협의회가 대책위와 대응을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는 고용노동부, 경찰, 화성시 등 책임당국이 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재해조사의견서를 투명하게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에 대한 요구도 담겨있다. 이번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지원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 등이다.

화성시와 경기도는 관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제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주민 및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전수조사한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때마다 유족이 협의회를 만들고,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국사회 현실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법과 제도, 정부의 역할이 온전히 작동했다면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집중할 것이고, 시민사회도 추모에 집중했을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고 있기에 유족들은 아픔을 뒤로하고 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라고 취지발언했다.

최근 전주 제지공장에서 특성화고 졸업 청년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가 '개처럼 뛰고 있다고' 하다가 과로로 희생됐다고 전한 양 공동대표는 "그리고 이곳 아리셀 현장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됐다. 가장 열악한 현장, 가장 극심한 착취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사회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잔인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 법률 이주, 인권, 종교, 시민사회 등이 모여 5명의 공동대표를 둔 대책위는 피해자 지원과 권리보장, 진상규명과 온전한 책임자 처벌을 만드는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양 공동대표는 밝혔다. 더해 "급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고, 한치의 의혹도, 억울함도 없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잠시 미루어 두고 산자들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족의 대표발언이 나왔다. 김태운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족들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며 '안녕하십니까' 인사 대신 '오늘도 버티자', '진상규명 될때까지 싸우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 뒤 "우리는 이 중대재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에 우리 대책위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기를 요청했다. 그것이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한 예의와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당국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을 지목하며 에스코넥 대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지만, 에스코넥은 유족 개개인별로 연락해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김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 당시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내용들로 사과를 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겠지만 그때처럼 아무런 대책없는 사과를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장이 제대로 규명되고, 응당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지난 1일 진행된 시민추모제를 화성시가 불허하고 이 과정에서 화성시 공무원이 유족에게 전화해 "추모제가 취소됐다"고 하는 등의 거짓과 압박을 가했다며 공식적으로 화성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노조(MTU)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70퍼센트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낙후된 기계, 설비로 고강도로 일해야 한다. 너무나 위험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해야 한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더욱이 아리셀 참사에서 사업주는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 이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었다. 그러니 이런 단단계 하청 파견노동이 더욱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불법 파견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